

국민권익위, 내년 예산 932억 원 편성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창출에 중점

“2022년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원년으로 삼아”

- 올해 대비 23.3억 원 증액된 932억 원 규모 예산안 편성
 - ◆ 공직사회 청렴성·공정성 제고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도적 정착에 전력
 - ◆ 국가청렴수준 획기적 도약을 위한 공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
 - ◆ 적극행정 확대,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국민 권익구제 강화
 - ◆ 국민고충 해소 효율성 증대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2021. 9. 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국민권익위 예산안을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23억 여원 늘린 93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정목표인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 △민간 부문의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① 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

먼저, 내년에 시행(22.5.19. 시행예정)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공직사회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14,568개, 적용대상 공직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는 만큼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집중한다.

※ 교육·홍보 및 신고처리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신설) : (2022안) +5.7억원

나아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 각종 의무사항의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기관별 중복 개발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 이해충돌방지법 정보시스템 구축(신설) : (2022안) +7억원

② 민간부문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청렴선진국 도약에 필수적인 공기업·민간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강화되는 국내·외 반부패규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마련·배포하는 등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지원을 강화한다.

※ 청렴교육 및 의식 확산 : (2021) 22.4억원 → (2022안) 26.2억원

*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 확대 : (2022안) +1억원

※ 청렴권익 민간협력 : (2021) 5.8억원 → (2022안) 6.7억원

* 윤리준법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신설) : (2022안) +1.3억원

③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편리성을

높여 적극적인 부패·공익신고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부패·공익 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절감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대하였다.

또,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의 무료화와 기능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확대하였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 (2021) 25.5억원 → (2022안) 29.6억원(+4억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 (2021) 1.1억원 → (2022안) 1.6억원(+0.5억원)

※ 부패·공익 신고 ☎1398 전화 무료화 및 기능개선 : (2021) 7.2억원 → (2022안) 8.6억원(+1.4억원)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해소 및 권익구제 분야의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④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을 통한 적극행정 선도

우선 법령 불명확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국민이 직접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예산을 반영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패·고충 제도개선 : (2021) 0.74억원 → (2022안) 0.97억원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등(신설) : (2022안) +0.23억원

⑤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업으로 선정된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국민 누구나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권익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 : (2021) 9.1억 → (2022안) 14억

* 행정심판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신설) : (2022안) +4.9억원

⑥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또한 국민권익위와 지방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업과 협력으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예산을 반영했다.

※ 범정부 시민고충처리시스템 BPR/ISP(신설) : (2022안) +1.9억원

⑦ 상담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사업 추진

아울러, 범정부 민원안내상담전화인 국민콜110을 중심으로 96개 정부콜센터의 상담데이터를 통합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 사업(‘22년~’23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상담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업예산) : (2022안) +93.7억원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도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권익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의식으로 국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으며,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의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6개 주요 공기업과 윤리준법경영 확산 추진

- 12일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 6개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적극 추진 및 인증 시범운영 참여

(2021. 8. 1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기업이 2022년 국가청렴도 (CPI)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한국가스공사(경영관리부사장 이승)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리준법경영 확산 및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리준법경영이란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부패행위, 비리 등 부패위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탐지·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1일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이용 토지투기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반부패·청렴 혁신과제'의 일환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및 인증 도입'을 위해 진행됐다.

향후 6개 공기업은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을 적극 추진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6개 공기업은 ▲윤리준법경영 제도 확산 ▲윤리준법경영의 저해요소인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신고자 보호체계 확립 ▲윤리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소통·홍보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6개 공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공기업 전반에 윤리준법경영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기업에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 진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청렴문화를 선도할 청렴교육강사 적극 양성한다

- 증가하는 청렴교육 수요에 맞춰 반부패 법·제도, 청렴의식
교육할 전문·소양 강사 인재풀 추가 확충 -

(2021. 8. 1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급증하고 있는 청렴교육 수요에 맞춰 청렴교육 전문·소양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청렴연수원은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 이수가 의무화 된 2016년 9월부터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지원할 청렴교육강사를 양성해 왔다. 현재까지 감사·청렴 업무 담당 공직자, 변호사, 교수 등 약 340명이 청렴교육강사로 등록돼 활동 중이다.

또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반부패 정책·제도, 다양한 신고사례 및 판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지속적인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반부패·청렴 교육을 주관하는 각급 기관은 청렴연수원 누리집 (edu.acrc.go.kr)에서 청렴교육강사의 명단과 전문 강의분야 등을 확인하고 출강을 신청할 수 있다.

< 청렴교육강사 제도 개요 >

유 형	강 의 분 야	선 발·등 록 절 차	출 강 절 차
전 문 강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제도 전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연수원 <u>강사양성과정</u> (기본+전문 과정) 수료 → <u>서면평가</u> 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연수원 누리집 강사명단 확인·신청 (각급 기관)
소 양 강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및 일반국민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인문·역사·철학 기반 교양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등록 <u>기초평가</u>(1차) → <u>강의역량 평가</u>(2차, 강의 시연) 합격 	

청렴연수원은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에 따른 청렴교육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청렴교육강사를 보다 적극 양성해 인재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청렴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을 통해 반부패 법령·제도에 대한 전문교육을 제공할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올해 30명 신규 양성한 데 이어 연말까지 3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또 이번 달 31일까지 공직자와 국민들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인문·교양 강의를 담당할 청렴교육 소양강사를 추가 모집한다. 일정한 강사 등록기준을 충족한 신청자가 2단계의 평가 절차를 통과하면 청렴교육 강사로 등록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정윤정 청렴연수원장은 “매년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부패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미래세대인 초·중·고등학생과 일반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할 전문성 있는 청렴교육강사를 적극 양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4년간 청렴문화 정착 이끈 반부패 우수시책 하나로 모은다!

- 78개 공공기관, 100개의 반부패 시책을 담은 사례집 발간 -

(2021. 8. 31.,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반부패 우수시책을 총망라한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5년차 공공부문의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발굴된 사례 중 78개 기관, 10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 각급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 취약분야 개선, 성과 확산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의 노력과 효과를 평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에 출범하면서 반부패·청렴과 공정을 국정 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언하고, 반부패 개혁의 완성을 위해 범 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민권익위는 내·외부 전문 평가단을 통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면서 반부패 시책 중 분야별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우수사례 중 국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총 100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사례집에 포함된 우수사례들은 기관 자체적인 취약분야를 분석해

내부문화 개선에서부터 각종 반부패 제도 운영, 정책 참여 및 홍보 확대까지 전 분야에 걸친 개선 노력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재직 중인 공직자의 퇴직자 추천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퇴직자의 민원·심사 등 신청에 대해 회피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 노력을 기울인 기관도 있었으며,

갑질 근절을 위해 내·외부 갑질 사례를 수집, 유형별로 구별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유튜브 웹드라마·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홍보와 교육에 활용한 기관도 있었다.

또한 소속·산하기관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참여토록 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패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와 함께, 시책 추진 시 애로사항과 극복방안도 함께 담아 기관에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온라인 책자 파일 형태로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반부패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하고, 대표적 사례는 영상물 등 청렴 콘텐츠로 제작해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 사례집이 기관에게 필요한 순간 언제든지 펼쳐들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관의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각급 기관이 함께 반부패 노력을 다하도록 널리 공유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못한다”

-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 1,569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98건 개선 권고 -

(2021. 8. 25., 국민권익위)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기관이 있었다.

예산 지급기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출특례규정을 두는 등 예산집행기준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

하고 채용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출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기준을 정비하고 투자·자금업무 심의위원회 운영 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 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한 임직원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수준의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현황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 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돼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개 요**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 (추진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30~32조

□ **평가 대상**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사규)

*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평가 기준**

- 준수, 집행,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기준으로 평가

평가분야		평가기준
준 수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① 준수부담의 합리성
		② 제재규정의 적정성
		③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행정의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내포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⑥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⑦ 접근성의 용이성
		⑧ 공개성
		⑨ 예측 가능성
부패통제	행정절차 전반에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등 평가	⑩ 이해충돌 가능성
		⑪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⑫ 소극행정 가능성

□ **평가 현황**

- (제·개정 법령) 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前 단계에 평가해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 '20년 1,999개 제·개정 법령 검토, 169개 법령, 347건의 개선권고 실시

- (현행 법령 등) 부패 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법령,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한국부패학회, ‘반부패·청렴’ 학술대회 개최

-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정책 실현 위한 정책진단과
향후 발전과제 심층 논의 -

(2021. 8. 27.,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부패학회(회장 조재현)는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진단과 향후 발전과제’를 주제로 27일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청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와 한국부패학회는 학술대회를 총 3부로 구성하고 법제·정책·추진 체계 등 3개 분야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먼저 1부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과 반부패 정책추진체계의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이승택 상명대 교수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발표한다. 이어 공직자의 대표적 행위규범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통합방안을 제안했다.

2부에서는 ‘사회적 부패(환경)방지를 위한 법정책학적 모색방안’을 주제로 정신교 목표해양대 교수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내부고발자 보상 강화 등 신고자 보호정책의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김애진 경상국립대 교수는 '지대추구와 부패'를 발표하면서 청렴도와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 및 내부 감사 기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반부패정책의 확립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역할과 국가청렴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주제로 이선중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지속가능한 국가청렴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이어 사회통합지수와 부패인식지수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학술영역에서 반부패·청렴을 연구하는 한국부패학회와 반부패·청렴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가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의 반부패·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부패학회 조재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심도 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확산을 위한 전략적 지원에 박차

- 교육, 체험, 정보 및 사례 공유 등 시민고충처리위와 협력하여 지원 -

(2021. 8. 19.,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가 지역주민의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구제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년 말 대비 9개가 증가한 58개 지자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 2017년 30개 → 2018년 37개 → 2019년 43개 → 2020년 49개 → 올해 8월 58개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지역 등에서 40여개의 지자체가 조례 제정, 위원 위촉 등 설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시민고충처리위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등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구제기관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의 상호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방문, 컨설팅 및 설치·운영 관련 정보 등을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반기에도 고충민원 처리실적이 많거나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 민원 해결 실적이 우수한 서울, 울산, 경기, 충청 지역의 시민고충처리위와 협업해 시민고충처리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민고충처리위 설치계획이 없는 광역 지자체,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 지자체가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를 벤치마킹해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설치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치를 추진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우수 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별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설치 추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체험, 정보공유 등 입체적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및 현장 조정을 참관토록 해 집단민원이나 사회적 이슈 민원의 해결 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

아울러 235명의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기법 교육, 사례 발표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워크숍을 개최하고, 누리집에서 시민고충처리위가 해결한 주요 고충민원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이 천만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운영이 우수한 시민고충처리위와 협력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코로나19 피해 전국 농어촌 고충 해소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투입

- 26일 전북 무주군을 시작으로 전국 농어촌 방문 -

(2021. 8. 26.,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26일 전라북도 무주군에 투입했다.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지역 등을 찾아가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듣고 해소해 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그 확산세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국내 소비 부진 등으로 농업인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라북도 무주군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국 농·어촌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현장에서 농업인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국민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을 찾아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겠다.”라고 말했다.